

# 가축방역관리 효율화의 주요 과제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1'-주요가축전염병의 발생동향과 대응과제

## 1.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유입 방지제도의 강화

최근 국내적으로 규모화, 집단화, 밀집사육에 따라 소모성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개방 및 교류확대로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등과 같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이 빈발하고 있다. 이들의 국내유입에 대한 사전 방지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축산물의 불법 휴대 및 반입, 축산농가의 악성전염병 발생국 방문 그리고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제도의 개발은 당면과제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위반 시 강력한 처벌과 범칙금 부과 방안이 제도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가축질병 및 전염병에 관한 검역 및 방역 제도를 구성하는 현행 법률체계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의 두 가지가 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제도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주체의 범위를 현행 농장의 축주와 수의사 이외에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사람으로까지 확대하여 초동방역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가축전염병 방역에 있어서 각 주체들의 차단방역을 위한 책임과 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일반인들과 축산관련 주체들의 차단방역 준수사항 및 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 2000년부터 이제까지 5차례에 걸쳐 발생한 구제역의 감염이 주로 해외 여행객 불법유입 축산물 (혹은 수입건초), 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농장주의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 등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가축전염병 관리법규의 현행 규정은 일반 여행객 및 농가들이 자율적인 차단방역 의무와 책임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법적 구속력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선진국과 같이 수입축산물의 검사에 있어서 수입상대국의 축산업 질병발생실태, 사양관리, 사료(원료사료 포함)의 유해물질 및 병원성관리, 동물약품 사용 등과 같은 축산 및 식품위생 정보와 해외가축전염병에 관한 수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등이 주



로 동남아 등 오염지역으로부터 지역 구분 없이 전파되는 현실에서 방역관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고, 공항 및 항만의 검역관에게 개봉검사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수행되는 수입 축산물의 검역과 검사에 있어서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방지와 관련된 사항은 보다 강력하게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입 축산물(도축·도계)검사는 육안검사를 통한 인수공통전염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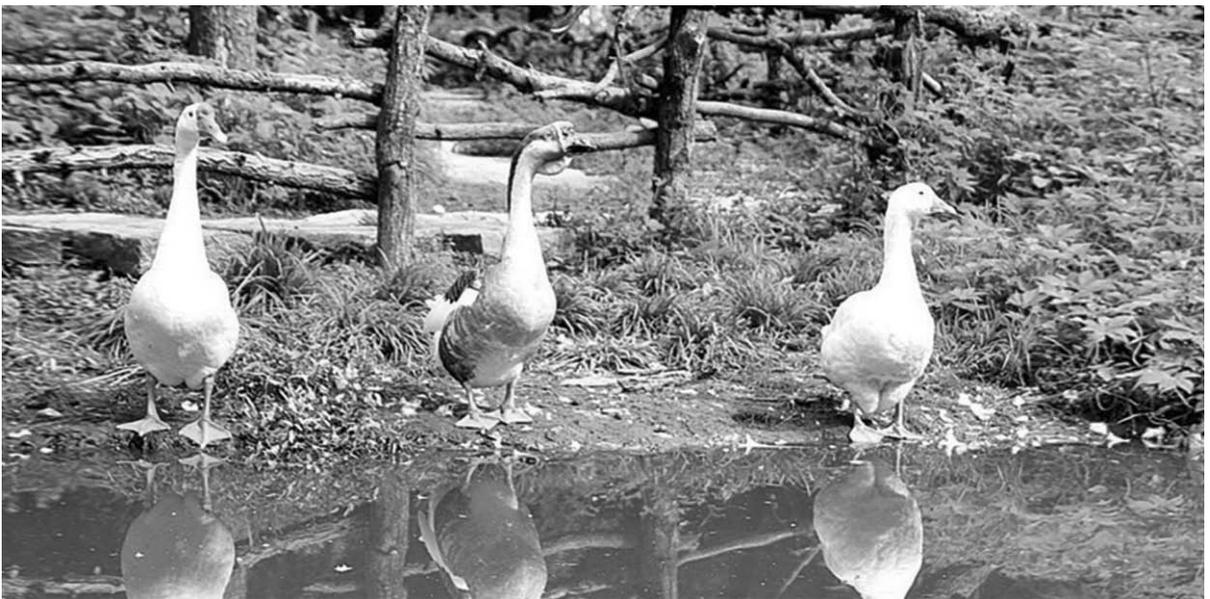
방제를 중심으로 하는 병리·해부학적 검사에 치중함으로써,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한 검사는 미약한 실정이다.

## 2. 가축전염병예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주로 동남아 지역(특히 중국 광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전 유입방지 및 가축질병검사 정보의 확보·수집·관리를 위한 사전 정보체제 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검역체제의 과학화와 제도개선 그리고 국내의 가축질병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내의 가축질병예찰정보시스템의 구축방향은 최근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다이옥신, O157:H7 등의 위해잔류물질과 병원성 대장균, 악성가축질병으로 인한





## 축산수첩

가축방역관리 효율화의 주요 과제

축산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정보체계와 연계·종합한 통합시스템이어야 한다.

선진국과 같은 형태 즉, 모든 가축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정보와 전국 농가 및 축종별 사육가축의 기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모의실험 모델과 전문가 시스템 모델을 통하여 국가수의정책의 결정과 질병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에 의한 가축질병예찰정보시스템의 운영은 국내외 가축질병 유입 및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가축의 수입 또는 대가축의 국내 지역간 이동시 이동 동물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가축질병 예찰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또한 가축의 매매 때마다 가축이동증과 검역증을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질병통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3. 검역 및 방역조직체계의 일원화 및 효율화

국가 방역관리에 있어서 현재 각각 별개로 나뉘어져 있는 자원동원조직, 기술지원조직 그리고 방역실행조직 간의 명령체계, 장비 및 인원동원 근거, 예산지원 근거를 일원화하여 방역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의 검역·방역조직 체계는 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연구 및 기술지원 포함)을 통한 전염병 유입방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실행은 생산현장과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로 3원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호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매우 어렵게 조직되어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기능이 방역보다는 검역과 가축질병 및 수의 관련 술 개발에 대한 국가 시험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제 초동방역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시험소의 역할 강화 그리고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연계성 강화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히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기술지원 차원의 관계로 맺어지고 있는데, 보다 효율적인 국가방역의 구현을 위해서는 양 기관 간에 연계성과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최일선의 방역기관에서의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방역기관은 축산물가공품 관리업무의 일원화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오히려 방역 전문 인원을 감축하는 등으로 인해 방역전문 인력 및 전염병 진단기술이 부족하여 긴급사태시 대처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이 과거 발생한 구제역과 다르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최초 발생농가의 신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방역기관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경북 안동지역 양돈단지의 경우 2010년 11월 28일에 구제역 의심 증상을 중앙 방역기관에 처음 신고하였는데, 실제 이 단지에서는 11월 23일에 지방 방역기관에 의심축을 신고하였으나 간이 항원키트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초동방역조치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 농가차원의 자율방역관리체계 정착

가축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농가의 자율방역시스템 구축과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법률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필요가 있다.

가축 전염병 및 질병이 농장 사육단계에서부터 관리·억제되어 차단방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사육농장 단위와 축사단위의 질병억제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표준적 가축위생관리기준, 그리고 청정 종축 유통 및 농가입식을 위한 표준적 질병관리체계 및 설비기준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식품산업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하고 있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제도를 확대하여, 농장의 가축사육단계에 대해 HACCP 제도를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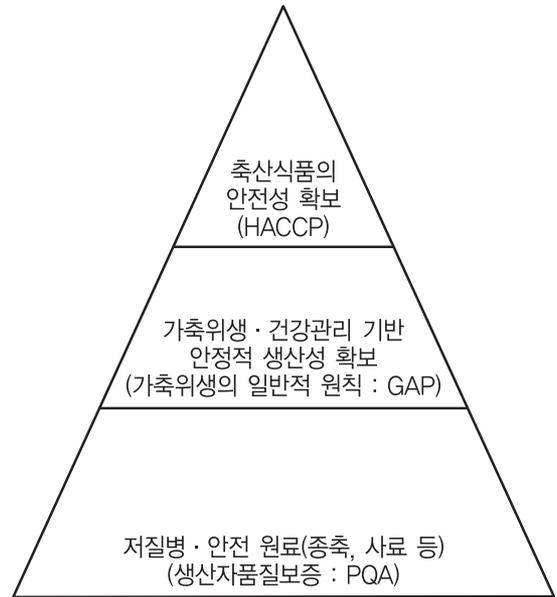
HACCP은 원래 위생과 안전성 및 품질을 보증하는 개념이지만, 농가차원의 가축생산단계의 HACCP 모형은 가축위생과 질병관리를 위한 중점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을 통제함으로써 가축방역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농산물 생산단계(과일 및 야채)에서 주로 보급되고 있는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즉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적용범위를 가축생산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GAP과 HACCP은 적정농축산 규범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특히 축산생산 특유의 가축위생·질병관리 일반원칙과 절차를 포괄한다면 가축방역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가축 사육단계에 있어서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방역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시·군 행정단위별로 구성되어 있는 질병관리단위를 축종별 사육밀집지대를 기준으로 한 역학단위로 질병관리단위를 재편하고, 질병의 역학적 구도에 바탕을 둔 운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림 17-2】 품질보증, 가축위생, 식품안전성 간의 관계



※주 : 생산자품질보증 (Producer Quality Assurance)

- 가축 사육단계에서 역학단위별로 질병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현재 덴마크 등 주요 축산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다.

축사 및 농장 내에 질병의 청정화, 즉 농가내로 병원체의 침입을 방지하는 동시에 병원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장단위로 담장(펜스) 등과 같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출입구를 한정하여 외부인의 농장출입을 철저히 상시 규제하는 축산인의 자율적인 제도 마련 및 정착 노력도 차단방역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